



정부 환경단체, 환경의 날에 엇박자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환경의 날은 정부의 기념식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집회 및 기자회견 등으로 엇박자를 기록했다.

특히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정부의 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박미경 사무차장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며 수상을 거부하는 등 불협화음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 등 1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녹색정부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복원·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21세기 환경 일류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윤리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도 한 장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행사장 앞에서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후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비난하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소속 회원들의 침묵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부끄러운 환경의 날, 아 새만금!’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와는 별도로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100여명의 환경·시민단체 인사들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투명한 운영이 보장된다는 원칙

에 입각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검토할 수 있는 새만금 신규상기확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 부안군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309km에 걸쳐 세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삼보일배의 대장정도 있었지만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정치적 차원에서 새만금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삼보일배 순례단 일원이었던 문정현 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북 도청 앞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핵 폐기장, 주민투표로 결정

정부는 원전 수거물(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위해·협오 시설을 건설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6월 12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갈등이 깊어져 주민의 의사를 우선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참여정부 환경정책은 얇은 환경주의

새만금 사업은 지속하되 토지의 용도와 개발방식만 변경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환경정책은 ‘얇은 환경주의’, ‘환경관리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의 박재목 교수는 지난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과 생태적 합리성을 포기하고 정치논리를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환경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정책이 성장과 발전에 수반하는 폐해를 개선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 정부의 환경관점에 최대의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환경관리주의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성장과 분배, 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사회를 표방했지만 출범 이후에는 환경보다 성장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며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때 전국이 회오리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홍중호 교수도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의 발족이 농지조성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 이는 새만금 사업의 강행 여부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재논의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운동, 어린이서약, 퍼포먼스 등을 벌일 계획. [연합뉴스]

갯벌 죽는다 큰 영향없다 공방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환경단체·농림부 입씨름



시민단체,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반대운동 돌입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지난 6월 12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에 반대하는 전국운동에 돌입했다.

쓰시협은 이날 낮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락 업체가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친환경 재질로 교체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까지 반대운동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1530선언문'을 발표했다.

1530선언문은 도시락 이용 계층이 15~30세 사이라는 점에 착안해 붙여진 이름이다.

쓰시협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1회용 도시락 업체인 한솔도시락의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시민 서명

지난 6월 10일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막이 공사가 완료됨에 방조제가 새만금 갯벌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방조제가 막히게 됨에 따라 갯벌 상당수가 파괴돼 갯벌 보존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림부 등은 "갯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새만금 갯벌 보존 의지를 밝히면서 '갯벌보존'과 '부분개발'이라는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조제 4공구 완공은 새만금 사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공구 물막이를 둘러싼 환경단체와 농림부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태. 새만금 갯벌의 지형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파도가 남서쪽에서 왔다가 북서쪽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4공구의 트인 구간이 물이 빠져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4공구가 막히 앞으로는 수량이 부족해지고 조차도 감소해 올 겨울부터 심각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연구원의 제종길 박사도 "담수의 양이 늘어나면서 해양생물이 집단폐사하고 수질이 빠른 속도로 악화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물막이 구간을 터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현재 4공구 뿐 아니라 2공구 개방구간을 다 막아도 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하면 갯벌의 91%가 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바



탕으로, 동진강 유역을 우선 개발하고 갑문을 통해 해수 유통을 시키면서 만경강 유역의 수질을 관찰한 뒤 만경강 유역을 추후에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승수 교수는 “최근 인공위성 관측 등을 통한 연구결과, 갑문만을 통해 해수유통을 할 경우 적어도 50% 이상의 갯벌이 죽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반박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는 “노 대통령이 ‘방조제 4 공구를 막아도 갯벌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담수호를 포기해 해수유통을 시키더라도 갯벌이 파괴되면 의미가 크게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핵폐기장 설명회 지자체들 거부

산업자원부가 핵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유치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군산시를 제외한 5곳의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거부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6월 9일 전남 영광군과 전북 군산시를 시작으로 13일까지 고창·영덕·부안·장흥 등 6곳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영광읍 한전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설명회는 ‘영광군 핵폐기장 반대 범군민 대책위’ 소속 주민 50여명이 행사장 입구를 가로막아 차질을 빚었다.

지난 6월 10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장흥군은 최근 “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며, 군민회관을 행사장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하고 군수 방문도 거절했다.

전남 영광·장흥군에 이어 나머지 3개 시·군도 산자부가 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

盧 환경철학 있나 시민단체들 분통

“새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어요.”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가 환경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룬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환경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 환경이란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요구가 잇따라 무시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부에선 “환경 철학이 없는 정부”라고 지적한다.

특히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렸던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물론 고건(高建) 국무총리마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들은 크게 실망했다.

예전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참석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4월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상실을 규탄하는 1천인 선언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환경의 날까지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간척사업·경인운하·한탄강댐 등 몇 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개발사업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0년 환경의 날에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강원도 영월댐을 백지화한 전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 건설은 계속되는 가운데 신구상기획단은 아직 꾸러지지 않았다.

환경단체를 기획단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경인운하와 관련해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환경단체의 요구도 거부됐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과연 이것이 참여정부인가”하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일보]

시민 66.8%, 환경위해 경제혜택 포기

수도권 주민 66.8%는 환경보존을 위해 경제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시민들 대부분이 친환경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환경의 날”(5일)을 앞두고 수도권 주민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한 시민의 선택’이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8%가 환경보존을 위해 경제적 발전이



주는 이익 및 혜택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환경보존을 이유로 경제적 발전이 주는 이익이나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주민은 32.8%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5.3%는 친환경제품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용제품으로는 재활용 제품(40.6%), 리필제품(36.6%)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경수준 '빨간 신호등'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 환경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고의 의미하는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 3일 발표한 '2002-2003 한국환경 보고서'에서 환경동향을 분석 정리하고 15개 부문, 28개 지표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의 환경수준 변화를 평가·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오염과 지하시설의 대기 오염, 산불 발생 건수, 자동차위주의 교통체제, 갯벌 면적의 감소, 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량,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분야로 꼽혀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특히 지하철 화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농도는 m³당 지상 70 μ g, 환승통로 153 μ g, 승강장 151 μ g으로 나타나 "지하에서는 숨을 쉬면 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 및 연안 생태계와 관련, 지난 10년 간 전체 갯벌의 4분의 1 가량이 감소했고 유류의 해양 유출량도 2000년 583kl에서 2001년 668kl로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과 시민들의 참여로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재활용 실적이 지난 96년 하루 1만3천84t에서 2001년 2만922t으로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환경오염 방지 지출이 2000년 대비 11.3% 증가하고 환경관련 민간단체가 꾸준히 늘어난 것도 녹색 신호등이 켜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항상 경제와 정치적인 논리가 환경보다 우선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향은 결국 국민의 삶을 길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색신호로 표시된 지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환경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화장품협회, 프탈레이트 성분 표시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업체 스스로 프탈레이트 성분명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월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시중에 유통중인 매니큐어 등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최근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율 규약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프탈레이트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 확정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오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지역오염총량제와 사업장총량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에 대한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해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특히 주요 내용인 사업장 총량제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유통업체 그린상품 매출급증

환경오염을 줄이는 그린상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린제품이 유통업체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50여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유통업체 그린상품 판매동향 조사'에 따르면 신세계, 롯데마트, 까르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그린상품 매출이 급증했다.

그린상품 대표 브랜드로 의류와 가정용품을 비롯해 1천 800여개 품목에 적용되는 신세계 이마트 '자연주의'는 작년 매출이 85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했으며 매출 신장률도 연간 40%에 달했다.

롯데마트의 세제류 그린상품 브랜드인 '주부사랑'의 작년 매출도 4억7천만원으로 전체 세제 매출액의 9%를 차지했으며, 재활용 물티슈와 화장지 등의 다른 그린상품의 매출도 28억원에 달해 50%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토종 유통업체의 그린상품 매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외국계 할인점인 까르푸도 '세계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그린상품 브랜드 '푸르네'를 출시하기도 했다.

월마트 역시 올해 초에 '그레이트 밸류(Great Value)'라는 주방용 그린제품 브랜드를 내놓고 연간 10% 이상의 브랜드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85.0%는 그린상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녹색소비자연대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상의는 전했다.

[연합뉴스]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제한 의정서 곧 발효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예방 조치로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생물안전 의정서) 가입국

이 최근 49개국으로 늘어 머지않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지난 20일 콜롬비아가 49번째로 조인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지난 5월 27일 보도했다.

의정서는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 특별회의에서 채택됐으며 50개국이 조인하면 그 90일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의정서는 생명공학이 불러올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 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과 취급,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0년 9월 70번째로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국회 비준은 안 된 상태다. 이 의정서가 자유로운 국제교역을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발효 이후에도 적잖은 논란과 마찰이 예상된다.

의정서는 무역기구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전자 조작 반대운동 진영은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끝내는 무역기구 규정들이 우선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

구미 산동 폐기물처리시설 갈등 새국면, 사업주, 행정소송 2심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대 60만평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인 <주>케이엠그린이 건축허가 등을 불허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23일 2심에서도 승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케이엠그린은 지난 2001년 9월 중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적정정보를 받은 뒤 60여만평을 매립장 부지로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추진과 동시에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5월 중순 구미시는 <주>케이엠그린측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과 산림형질변경신청을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했고, 회사측은 그해 7월 초순 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결과는 지난해 11월중순 1심에 이어 지난 23일 대구고등법원의 2심에서도 회사측이 승소했다. 구미시는 관계절차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현재 소송진행 상황으로 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측은 반대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을 상대로 대구지법 김천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재산압류를 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장 신설계획이 발표되자 구미시 산동면 백천리 주민들은 곧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나섰다. 구미시 산동면과 장천면, 하류지역인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안계면 주민들은 3차례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반대집회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 감사원 등에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적 대응도 하고 있다.

한편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주민들과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케이엠그린 관계자는 “행정소송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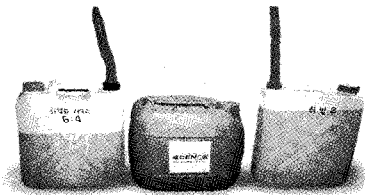
지자체 너도나도 그린벨트 해제 추진

광주 어등산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단체들이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26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도심에서 가까운 어등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려 한다”며 “테마파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는 사업의 이름을 시민체육휴양타운 역사관 광거점단지 태권도공원 빛의 테마파크 등으로 잇달아 바꾸며 4차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비난을 피해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세녹스]휘발유보다 성능 우수



시민단체가 유사 석유제품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실험결과를 발표, 세녹스를 둘러싼 정부, 업계, 시민단체 간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물질 배출 연비 엔진부식성 등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비교 실험한 결과, 세녹스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정부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자동차정비공학회에 의뢰, 실험한 결과 세녹스(휘발유 60에 세녹스 40를 섞은 제품)가 휘발유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6, 탄화수소는 62.2, 질소산화물은 23.7 퍼센트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또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최고 14의 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환경기술연구소에 의뢰해 3시간 가량 엔진 부식성을 실험한 결과 세녹스와 휘발유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등은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경제성이나 엔진 부식성 문제에서는 이번 실험 결과만 갖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리터당 원가가 휘발유는 405원, 세녹스는 440원으로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860원가량의 세금이 세녹스에 부과된다면 경제성에서 휘발유에 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틸알코올은 엔진 뿐만 아니라 고무와 연료공급계통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배제됐고 실험시간도 3시간에 불과해 실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세녹스가 연료첨가제인지 유사 석유제품인지 여부가 이미 법정 논쟁으로 비화한 상태에서 이 같은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환경신문]



세녹스 · 솔렉스 대체에너지 아니다

㈜프리플라이트 제품인 세녹스와 솔렉스는 국내산업 육성과 외화 절약이라는 대체에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대체에너지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의 신부식 박사는 최근 환경운동연합 산하 에너지대안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제조사와 판매사는 세녹스를 알코올이 포함된 대체에너지라고 선전하지만 원료가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또 “프리플라이트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석탄액화유인 솔렉스도 수입 완제품이라는 점에서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에너지의 입법 취지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연료 보급에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수입된 완제품 연료를 대체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현행 석유사업법상 유사 석유제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면서 “정상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유사 석유제품에도 부과금을 물려 세금 차이로 인한 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구환경 보전과 자원고갈이라는 관점에서 화석연료는 대체에너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원자력인가, 재생가능 에너지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우라늄은 앞으로 100년간 쓸 정도만 남아 있어 원자력에 크게 의존할 경우 파탄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풍력, 조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로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도 “매장량이 한정된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확대할 때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 체제에서 탈피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환경부 자문 심의기구 있으나 마나

환경부에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 대부분이 회의를 1년에 단 1차례도 열지 않았거나 1~2번 여는데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이나 시민단체 관계자의 위원 위촉률도 권고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부처에 설치된 자문·심의 위원회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등 모두 29개로 장·차관과 실·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중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하수도자문위원회, 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해 동안 평균 63회의 회의를 열었지만 3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평균 1.8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